

박근혜, 다시 뇌물죄 수사선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뇌물 상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국정원 상납 사건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부상하게 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건넸다. 당시 국정원은 '007가방'에 5만원권을 채워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게 돈을 상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

이재만 "박근혜 지시로 국정원 돈 받아" 진술 정치권 등 "국정원 뇌물, 차 정치자금 가능성"

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납시켰다. 안 전 비서관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부터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붙잡아 조사하면서 국정원 상납의 경위와 '윗선'을 캐는 데 주력해왔다. 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었다.

이 가운데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이 진술대로라면 검찰 칼끝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하는 수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측근인 두 비서관을 시켜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상납토록 시주한 혐의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새로운 뇌물 혐의의 피의자가 되는 셈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건넨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등 친위부대에 가까운 정치세력을 유지하는 데 국정원 돈이 쓰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가 국정원 돈을 조달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대구·경북 지역 경선과 관련해, 사실상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열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국정원 상납의 구체적인 경위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밑의 도끼'이자 최측근이었던 이 전 비서관이 '윗선'을 실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발등을 찍히고 검찰 수사는 새 국면에 접어들어간다. /뉴스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9.4%... 민주당 50.9%

문재인 대통령의 주중 국정수행 지지율이 2일 69.4%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2.2%포인트나 오른 수치로 지난달 31일 한중 정무 관계 개선 협의를 발표하고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고무적 반응을 얻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유권자 1,52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중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69.4%로 2.2%p 오르며 9월 1주차 이후 약 2개월만에 다시 70%선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긍정평가가 가운데 '매우 잘한다'는 45.5%, '잘하는 편이다'는 23.9%였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p 내린 25.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일일 지지율은 흥중화 중순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이 이어졌던 지난달 30일에는 66.6%까지 떨어졌었다. 지난달 31일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양국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하고, 전 정부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 보도가 확산된 당일 지지율은 69.6%까지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던 지난 1일에는 지지율이 71.7%까지 올라 취임 약 2개월 만에 70%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50.9%로 문 대통령 지지율의 전반적인 상승세와 함께 1.7%p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친박계 의원 출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증폭되면서 1.4%p 떨어진 17.5%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0.7%p 오른 6.6%, 정의당은 1.0%p 상승한 5.7%로 지지율 3, 4위에 자리매김했다. 바른정당은 통합과·자강과·통합전대파로 분열되며 0.3%p 떨어진 4.4%였다.

이번 집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9,103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1,522명이 답을 해 5.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장호중 등 파견검사 '사법 방해' 檢, "수사·재판 과정에도 관여"… '우병우, 필요하면 조사'

국가정보원 파견 시절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전 부산지검장 등에 대해 검찰이 '사법 방해'라고 판단,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색 대상 물품으로 내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장 전 지검장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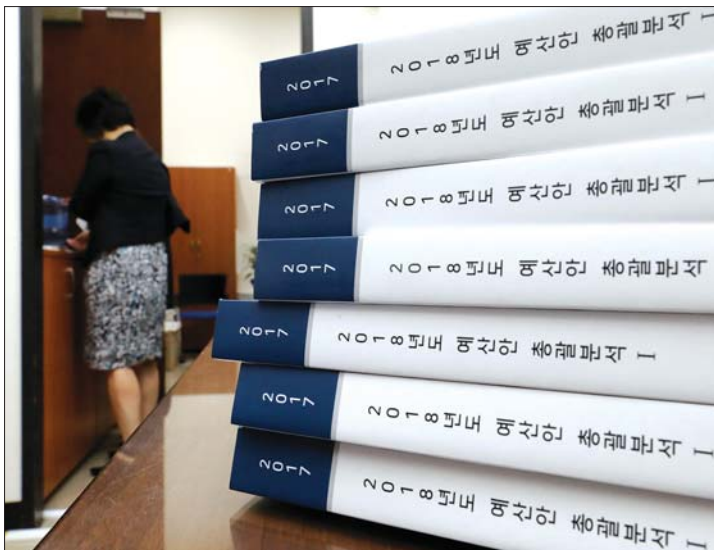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수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본 뒤 향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의 세력을 수집, '비선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누구라도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 등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흔외자' 불법 정보 조회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수사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다"라며 "현재까지는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뉴스



예산국회 들임... 예결위에 쌓인 분석 자료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2018년도 예산안 출괄분석 자료가 쌓여 있다. 국회는 예결위는 3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홍준표, 3일 최고위서 차 탈당 '표결' 없이 확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는 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고 확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역인 서정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최고위가 아닌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

홍 대표는 전날 초선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2일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재산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3일 최고위에서 표결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 장제원 의원이 전했다. /뉴스

김광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5,000개에서 현재 47만개에 육박해 약 18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이 공익형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2018년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공익형 일자리 수당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22.7% 인상된 반면, 근로시간이 공익형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노동강도가 높음에도 낮은 보수를 받는 시장형 사업의 위축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렵기에 시장형 사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정립 및 노인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자립 도모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학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경하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인제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주관하였으며, 관련 기관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해 노인일자리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진성 기자

제3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2017. 11. 3. ~ 5. 3일간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주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063)320-2841~2